

# “가야 하나 멈춰야 하나...우회전 여전히 헛갈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한 달...북구 말바우사거리 가보니  
10대 중 6대 '일시 정지' 준수...가도 되는데 멈춘 차량 13%  
“딱지 떼일까 무조건 멈춰” “법 취지 공감...제도 홍보 강화를”



11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북구 말바우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택시가 보행자들이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예기감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김상엽 교통안전팀장은 “개정법은 보행자 안전에 방점이 찍혀있다. 운전자들은 헛갈릴 때 일단 두 가지를 명심하면 된다”며 “횡단보도

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고,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장에서 만난 운전자들은 개정법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도 홍보는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민지(여·34) 씨는 “혹시나 딱지를 떼일까 봐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고 있다. 내가 우회전 차량 중에 제일 앞에 있을 땐 긴장이 많이 된다”고 했다. 최익환(51)씨도 “그냥 남들 따라서 적당히 한다”면서 “신문에서 그림으로 설명돼 있는 것을 본 적 있는데 너무 복잡하더라. 알기 쉽게 홍보를 강화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택시·버스 운전기사들은 홍보 강화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김재환(50)씨는 “가야 할 때 안 가고 가야 할 때 가는 운전자들이 많다”면서 “오히려 우회전하는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신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년째 택시를 모는 김운철(60)씨는 “이전과 달리 우회전할 때 차량이 정제되는 사례가 많다”며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 직진 차량이 빠르게 와 바뀐 우회전 법으로 하면 우회전 차량이 많이 못 지나간다. 이런 곳은 신호 체계를 변경해서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되지만, 경찰은 현재 3개월의 유

“여전히 헛갈립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회전이 가능한데 앞차가 안 가니 답답해 죽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로 시행 한 달을 맞이했지만, 운전자들 다수는 우회전 관련 개정 법규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등 비교적 운전이 능숙한 이들은 법규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야 할 때 가지 않는 차량 때문에 정체가 빚어진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찰을 향해 우회전 관련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일보가 11일 오전 11~12시까지 한 시간 동안 광주시 북구 말바우사거리에서 우회전 차량을 지켜보니, 전체 130대 가운데 일시 정지를 준수한 차량은 85대(65.3%)였다. 멈추지 않고 우회전해야 하는데도 멈춰선 차량은 17대(13%)였다. 선행 차량이 움직이지 않거나 보닛 뒤에 있던 차량 4~5대가 움직이지 못하자 ‘뺑뺑’하는 경적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그때서야 맨 앞 차량이 움직였다.

반면 28대(21.5%)는 법규를 무시하고 우회전했다. 10대 중 2대 이상이 보행자 통행권 강화에 방점이 찍힌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규 위반 차량이 잇따르다 보니, 개정법 시행 한 달 간 광주에서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통사고가 이어졌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27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청 인사는 졸속”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9월 1일자로 전남도교육청의 민선 4기 첫 주요 보직 인사와 관련 논공행상에 따른 졸속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현장 지원, 전남형 교육자치,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 실현을 위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 발탁 임용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교육대전환의 전망은 없고 논공행상 보은인사와 규정 위반만 보인다”고 혹평했다.

전남지부는 신임 교육국장, 정책국장, 핵심 과장이 장학관, 교육장, 팀장 시절 주요 업무와 활동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불공정 논란을 낳은 점을 일일이 언급하며 “교육대전환과 전남형 교육자치를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혼선을 막기 위해 전

직 기준인 1년을 지키는 것이 관례임에도 교장 경력 1년 미만 전문직들의 교육국장, 교육장, 산하기관장 행(行)이 잇따라 이뤄졌다며 이를 학교구성원을 무시하고, 학교를 등한시하는 대표적 인사정책으로 규정했다.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정책국장 과 교육국장 모두 6개월, 유초등교육과장과 광양교육장은 발령 1년 만에 교체하고 정년 2년도 남지 않은 일부 인사들을 교육장으로 발령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전남지부는 “이번 주요 보직 인사는 지역의 교육주체와 지역민을 무시하는 독단적 조치”라며 “적재적소보다는 선거에 피해 주면 교체하고 선거에 공이 크면 보은하는 논공행상 정치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광주 고교 ‘학원 강사 보충수업’ 논란

“공교육 흔들” vs “실력 향상”  
시민단체 “학사운영 감사해야”

광주의 한 고교에서 유명 학원 강사들을 초빙해 보충수업을 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특정 고교에서 유명 학원강사들을 초빙해 보충수업을 맡기는 등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교는 올 1학기부터 학원강사 등 외부 강사를 초빙해 1~2학년년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8~9시에 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1학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각 1개 반이 운영되고, 2학년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미적분 각 1개 반과 수학 I·II 1개 반이 운영된다.

1학기에는 학생 100여명이 보충수업에 참여했고, 2학기에는 학생 160여명이 보충수업 참여를 희망했다.

학생들은 보충수업을 무료로 듣는다. 학교 측은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강사에게 수업 1시간당 4만원을 지급한다.

시민모임은 이에 대해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예산마저 임시 수단으로 활용하는 민첩성도 놀랍지만, 사교육 종사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도록 학교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장은 “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일선 고등학교가 작년까지 실질적으로 ‘수요공동체의 날’(가정의날)을 운영하면서 8교시 이후 보충수업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외부 강사에게 보충수업을 맡기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호응한다”고 말했다.

교장은 외부 강사에게 보충수업을 맡긴 이유에 대해 “매주 월·화·목·금요일 보충수업을 하는 교사가 수요일 하루만은 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수요일만 교사와 동일한 수당(시간당 4만원)을 주고 외부 강사를 초빙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영유아 수족구병 유행

코로나19 유행 후 주춤했던 수족구병이 광주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족구병은 물질성 수포가 크고 증상도 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함께 지역 7개 의료기관을 방문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내 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족구병 검출률이 급증했다. 지난 6월 5건 중 1건에 불과했지만, 7월에는 6건 중 4건, 이달 들어서는 20건 중 18건이었다.

이번에 유행하는 수족구병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다르게 손과 발에 생기는 수포가 크고, 증상이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족구병은 3~7일간 잠복기 후 입안에 물집과 궤양, 손과 발에 물질성 발진이 나타나며 고열, 구토, 설사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대변, 호흡기 분비물, 물집의 진물 등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대변에서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바이러스가 분비될 수 있다.

서진중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줄어들면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아 자칫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교육청 하반기 인사

광주시교육청이 하반기 교육공무원 193명에 대한 9월1일자 정기인사를 11일 단행했다. (인사 명단 20인)

주요 보직으로는 정책국장에 최영순 광주교대광주부설초 교장, 교육국장 김중근 광주효광중 교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김제안 광주체육고 교장이 임명됐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광주교육 가족이 추구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혁신적 포용교육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거시적 차원에서 광주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풍부한 경험과 의지를 갖춘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을 ‘배제’하고 이번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장상민 초등교육과장과 백기상 중등교육과장을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과 학생교육원 교학부장으로 장기 출장 명령했다.

또한 같은 날 노정현 초등인사담당 장학관과 정원미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은 생활·대안교육 장학관과 사학정책 장학관으로 파견됐다.

대신 안진홍 장학관과 김형진 장학관이 파견 형식으로 초등인사담당 장학관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이 배제되고, 인사 담당 장학관들이 파견형식으로 교체돼 9월 1일 자 교원 정기인사가 발표되는 시교육청 역사에서 드문 일이 발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220727-중-142427호

# 검사부터 수술까지 당일치료 지향 전립선비대증치료

※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

고령이나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국소마취하여 짧은 시간에 수술 가능한 전립선비대증 치료방법이다.

수술 원리는 전립선을 묶어줄 수 있게 고안된 견인사를 내시경을 통해 결찰하여 막혀있는 전립선 요도를 개통하여 주는 원리다.

### 장 점

- ▶ 고령 및 고위험군에서도 수술 가능
- ▶ 국소 / 수면(의식하진정) 마취하에 수술 가능
- ▶ 심장 스텐트 시술 환자, 뇌졸중 환자 등 항혈전제 복용 환자인 경우 약물 중단 없이 수술 가능
- ▶ 짧은 수술시간 (15 ~ 20분 정도)
- ▶ 검사에서 수술까지 당일수술 및 퇴원가능

### 단 점

- ▶ 100g 이상 거대 전립선의 경우 치료 효과가 떨어져 적응증이 되지 않음

※ 수술 후 일시적 요폐, 요금 및 자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결찰술은 **장기간 전립선 약물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수술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밀한 검사와 수술이 당일 진행**되어 퇴원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 전립선비대증 치료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

서초구 서운로 220,4층(서초동 1302-2) 9호선 신논현역 9번출구 **자이비뇨의학과병원** 010-4482-5670